조선문제가 국제화되기까지 5

조선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조선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조선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 106(2017)년

차 례

1. 조미핵대결전

랭전이 종식된 후 조선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특히 《핵문제》를 구실로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이 매우 우심하였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그 발생근원과 경위, 본질과 현 사태의 책임의 견지에서 볼 때 철두철미 조선과 미국사이에 해결할 성격의 문제이다.

그런것만큼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다른 나라들이나 국제기구, 유엔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를 끌어들이였으며 심지어 유엔까지 개입시키려고 여러모로 책동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국제무대에서 조선을 고립시킴으로써 저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하자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1990년대 전반기 조선반도정세는 미제가 일으킨 《북조선의 핵개발의혹》 소동으로 하여 격화되였다.

미제는 《핵문제》를 걸고 조선을 국제적으로

고립질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놓고있었다.

20세기 마지막년대인 90년대의 문턱을 넘어서자 인류는 이전 쏘련의 붕괴와 페르샤만전쟁이라는 충격적인 사변을 목격하게 되였다. 세계가 아직 이 충격의 여파에서 깨여나지 못하고있을 때 미제는 세기에 세기를 이으며 가슴에 품어온 탐욕적인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단계의 작전을 펼치고있었다.

새로운 작전무대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대결이 가장 첨예하고 지구상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이 제일 큰 조선반도였다. 작전의 기본목표는 랭전후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회주의보루인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고 전조선을 거머쥐는것이였다.

미국의 죠지타운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상급연구원 빌 크라넬은 《북조선은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완강히 도전할수 있는 군사적실체》라고 하면서 《북조선의 사회주의실체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 시기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국에 대하여 이래라저래라하면서 직접 도전하는것은 이 지구상에서

북조선 하나뿐이라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1960년대-1970년대 공산주의운동이 존재하던 시기에도 미국을 위협하면서 도전한것은 사실상 북조선뿐이였다. 그 누구도 감히 미국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주저하고있는 오늘에도 워싱톤을 굴복시키려 하는것이 다름아닌 북조선》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조선을 폭력으로 굴복시키기 위하여 미제에게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행동을 정당화할 구실이 요구되였다. 이를 위하여 미제는 갖은 모략을 다 꾸미였다. 미제가 선택한것이 북조선의《핵무기개발의혹》이라는 핵카드였다.

1990년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부쉬(1세)는 미중앙정보국의 모략가들이 작성한 북조선의《핵위협》작전안을 검토하고 조선의《핵문제》를 유엔에 제소함으로써 동맹국들을 끌어당겨 조선을 반대하는 국제련합을 형성해보려고 꾀하였다.

부쉬는 랭전이 종식된 이후 사회주의보루로 남아있는 조선을 압살할 목적밑에 조선을《핵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완성할데 대한 지시를 떨구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공화국음모가들은 인공위성들이 촬영한 사진들을 합성조작하여 그 무

은 《자료》라는것을 꾸며내였다. 그 《자료》란 북조선의 핵시설이 연구용원자로와 재처리공장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폭탄제조시설이라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이에 대하여 공개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전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매수된 앞잡이들을 내세워 조선의 《핵문제》를 가지고 거짓증언을 하게 하였으며 언론들을 총발동하였다.

페르샤만전쟁후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돌연 하나와 같이 조선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생산하고있기때문에 《랭전종식후의 세계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있다고 떠들기 시작하였다. 《뉴욕 타임스》 1991년 2월 4일, 4월 17일, 6월 2일부 그리고 《워싱톤 포스트》 4월 8일부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은 조선이 핵무기생산을 기도하고있다고 하였다.

더우기 미국무성과 국방성은 공식적으로 조선의 《핵의혹》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떠들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고아댔다.

이러한 선전광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미중앙정보국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북조선의 핵개발이 완성되는 시간표를 짜맞추어 그럴

듯한 정보를 퍼뜨리였다. 어떤 기관은 그 시기를 2～3년후 혹은 수개월후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기관은 북조선이 벌써 1～2개의 핵무기를 개발했을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로 다른 정보자체가 《북조선의 핵개발설》이 날조된 거짓광고라는것을 스스로 폭로해주었다.

미제가 조선의 《핵무기개발의혹》에 대하여 그처럼 요란하게 선전하였으나 그러한 의심은 언제 한번 그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된 일이 없었다.

미제의 이러한 핵소동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구실과 국제적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였다.

때문에 미제는 조선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저들의 도발이 매번 타격을 받았으나 《북의 핵개발저지》라는 명색밑에 반공화국핵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1992년초까지만도 조선의 《핵무기생산이 박두》했다고 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떠들던 미제는 조선이 핵안전담보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플루토니움을 소량이나마 추출한것이 확인》된 조건에서 《이미 핵무기를 생산

하여 감추어놓았을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군사기지에 대한 국제적사찰문제까지 들고나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가 계획적인 준비밑에 조선에 대한 핵소동을 일으켰으며 그 목적은 구실을 바꾸어가면서라도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핵압박분위기를 조성하려는데 있었다.

미제는 조선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를 저들의 하수인, 대변인으로 내세우고 조종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조선을 걸고들수 있는 거짓자료들을 넘겨주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다른 나라들의 핵활동에 대한 유엔의 감시통제기구로서 철저히 국제적정의와 평등성, 공정성을 기본활동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자체규정에는 핵시설에 대한 사찰시 제3국의 정보를 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혀져있다.

이것을 모를리 없는 미제였으나 그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활동원칙으로 하는 국제원자력기구까지 저들의 목적실현에 리용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정찰위성으로 조선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고 녕변에 《핵무기개발시설》이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에 귀띔하였다. 그 정보내용이라는것은 녕변핵시설이 송전시설이 없고

핵뢰관폭발시험장이 있는 전형적인 《핵무기개발장소》라는것이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조선의 교전일방인 미제가 제공한 날조된 정보자료에 근거하여 조선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찰과정에 미제가 제공한 정보와는 달리 조선의 핵시설에 랭각탑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고 송전시설이 있는 전력생산용시설이며 《핵뢰관폭발시험흔적》이란 물웅뎅이에 불과하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이렇게 미제는 저들이 조작한 거짓정보자료를 국제원자력기구에 넘겨줌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선을 걸고들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지지통신은 1990년 11월 16일 미국이 조선의 핵활동에 의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험적인 〈정탐위성사진자료〉를 만들어 기구서기국과 서방나라들에 배포》하면서 《핵무기개발설》을 류포시켰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영국신문 《데일리아와즈 인터내슈널》 1994년 4월 4일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조선을 사찰하고 핵시설들이 평화적목적에만 리용되고있다는 〈건강증명서〉를 준바 있다.

그러나 미중앙정보국이 자기 간첩위성을 통하여 찍은 사진들을 제시하자 기구는 놀랍게도 제3국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기구사찰에 리용할수 없다는 기구규약을 위반하고 북조선에 〈특별사찰〉요구를 제기하였다.》

저들이 조작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보내준 정보자료가 거짓이라는것이 드러나 더는 조선에 대한 핵소동을 벌릴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미제는 당황망조하여 동분서주하였다.

미제는 조선의 평화적핵활동에 대한 그 무슨 《불일치점》이라는것을 구실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선에서 《특별사찰》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비정기사찰결과를 체계적으로 저들에게 넘기도록 하였으며(국제원자력기구는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초까지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진행하였다.) 그들이 만들어낸 그 무슨 《불일치점》이라는것을 문제삼아 조선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를 들고나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조선의 평화적핵활동의 특징은 조선의 주객관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핵동력개발에서 자

립성의 원칙을 견지한것이며 사찰의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아직 정상운영되고있는 핵시설이 아니라 시험단계에 있는 핵시설들을 가지고 기구사찰에 응하였다는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은 사찰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응당 조선의 이러한 핵활동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신고한 통보와 기구의 측정결과사이에 《원칙적불일치》가 존재한다는 부당한 주장을 들고나왔다.

1993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사이에 조선에 왔던 제6차비정기사찰단은 두개의 《원칙적불일치》설을 들고나왔다. 첫번째 《불일치점》이라는것은 조선이 신고한 플루토니움의 조성과 량이 기구가 계산한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것이며 두번째 《불일치점》이라는것은 방사화학시험소에서 추출해낸 플루토니움조성비가 페수에서의 그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여있는 초기보고서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문건들을 사전에 제출하였으며 6차례에 걸치는 비정기사찰과정에 기구사찰원들에게 운영기록부를 비롯하여 현지에 보관되여있는 문건들을 다 보여주었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이 모든

사실과 과학기술적론거들을 무작정 부인한것은 미제가 사전에 짜놓은 각본에 따라 《불일치》문제를 두개의 군사대상과 억지로 련관시켜 그에 대한 《특별사찰》명분을 세워보려는데 있었다.

그것은 미제가 1992년 7월 22일 미국회 하원《합동청문회》에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을 참가시키고 조선의 핵사찰에 대하여 통보받은것과 함께 그에게 조선에 대한 《특별사찰》, 《기습사찰》을 진행하도록 강요한 자료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당시 미중앙정보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당면하여 미국은 북조선으로하여금 특별사찰을 접수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핵사찰결과에 따라 대북조선정책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미제는 있지도 않은 조선의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과 성원국들을 조종하여 끝내 1993년 2월 25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회의에서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선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부당한 《결의》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미제가 조선의 평화적핵활동에 대한 그 무슨 《불일치점》을 운운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작

당하여 조선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를 조작한것은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

미제는 조선의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넘기도록 국제원자력기구를 조종하였다.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조선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기도를 실현할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조선문제를 끌고가 국제적인 집단적압력으로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꾀하였다.

1993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미국정부안에서는 극비밀리에 조선문제와 관련한 《새 전략》이 제시되였다. 미국무성이 작성하고 클린톤이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되여 백악관이 승인한 이 구상은 조선반도의 핵위기가 《국제적인 위기》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을 《북조선비난》이라는 선에서 규합하여 유엔마당으로 끌고가는 전략이였다.

《새 전략》실현을 위하여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떠밀었다.

미제는 1993년 4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사회회의에서 기구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조선에 《담보협정불리행》딱지를 붙여 조선의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넘길데 대한

부당한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은 체약국들은 조약에 가입한 후 1년 6개월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게 되여있다.

조선은 핵동력공업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도 실현하면서 동시에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부터 1985년 12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조약에 가입한 후에도 미제는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 증대시켰다. 조선은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을 1년 6개월내에 체결할래야 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공화국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선을 지지하는 국제적여론이 확대되게 되자 미제는 형식상이나마 조선에 대한 핵위협중지를 말로라도 약속하였다.

담보협정체결조건과 환경이 조성된 조건에서 조선은 1992년 1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것은 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였다.

이렇게 마련된 담보협정에 따르는 의무를 조

선은 성실히 리행해왔다.

조선은 담보협정이 발표된 후 협정 제42조와 제62조에 따라 1992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에 보내게 되여있는 핵물질초기재고량보고서와 핵시설들에 대한 설계통보서를 기한을 훨씬 앞당겨 5월 4일에 제출하였다.

1992년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원자력기구대표단의 조선방문을 실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핵시설대상들과 의심스럽다는 대상들을 보여주었다.

또한 담보협정 제71조에 따라 초기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검증을 위하여 6차례에 걸치는 국제원자력기구 비정기사찰단의 사업을 적극 협조하여주었다.

이 기간에 조선은 기구사찰단에 수백건의 회계 및 운영기록문건들을 제공하고 그들이 필요하다는 개소에 연 80여개의 봉인을 하고 6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편의를 도모해주었으며 90여개의 시료를 뜰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였다. 이외에도 조선의 성의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현장들을 조사하도록 조건을 보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협정을 성실히 리행하여온 조선에 《불리행》딱지를 붙여가며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핵문제》를 끌고가려는 미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책동은 기어이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성사시킴으로써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국제적으로 고립압살하려는 범죄적인 책동이였다.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로 하여금 조선에 《담보협정불리행》이라는 딱지를 붙이도록 하는것과 함께 조선의 로심연료교체가 연료봉의 차후측정을 위한 기술적가능성을 상실하게 하는듯이 사실을 외곡하여 그릇된 보고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조선의 로심연료교체문제를 토의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보고를 제출한것은 1994년 5월 27일이였다.

같은 시각 평양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파견한 협상대표단이 조선과 5MW시험원자력발전소의 로심연료교체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한창 진행하고있었다.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계속된 협상에서는 교체된 로심연료의 차후측정을 위한 기술적가능성문제가 기본으로 토의되였으며 여기에서 기구협상대표단은 조선식 방법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기구에 돌아가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구서기국은 기구협상대표단이 윈본부에 도착하기도전에 그에 대한 명백한 해명도 없이 무턱대고 로심연료의 차후측정가능성이 상실된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보고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는 공정성을 잃고 미제의 정치적모략의 수치스러운 도구로 리용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제원자력기구를 배후에서 조종하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미제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1992년에 미중앙정보국은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한 보고에서 《미국은 특별사찰그루빠에 미국이 신용할수 있는 성원들을 망라시켜야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중앙정보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그루빠의 선발로부터 기구의 모든 활동을 막후에서 조종하며 좌지우지하는 사실상의 주인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는 1994년 6월 10일 국제원자력기구로 하여금 또다시 조선의 《핵문제》를 걸고 군사대상물들에 대한 개방을 강요하면서 조선에 대한 《기구의 협조를 중단》한다는 《결의》까지 채택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때까지 위협과 공갈로서 감행되던 미

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드디여 무모한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당시 조미사이의 제2단계 회담이 미제의 부당한 립장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었고 조선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협상에서도 조선의 특수지위하에서의 담보의 련속성보장문제를 두고 대립이 커가고있었다. 협상탁에서까지 대조선적대시정책수행을 집요하게 꾀하던 미제와 국제원자력기구는 그런 오그랑수가 절대로 통할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드디여 행동으로 넘어갔던것이다.

사실상 미제의 조종하에 국제원자력기구가 《협조중단》선언을 발표한것은 조선에 대한 그들의 로골적인 제재와 봉쇄의 선포였다.

이처럼 미제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거짓정보자료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공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구를 전면에 내세워 《특별사찰》, 유엔에로의 이관, 《협조중단》과 같은 날강도적인 《결의》들을 조작해냄으로써 조선의 《핵문제》를 국제화하고 조선에 대하여 집단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온갖 범죄적책동을 다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 제5조에는 다른 나라들의 핵시설들에 대한 사찰과정에서 얻은 일체 자료들은 철저히 보호할데 대한 의무가 지적되여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은 처음부터 담보협정에 따라 진행된것이 아니라 미제의 조종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제1차 비정기사찰시 국제원자력기구는 보고서를 미국에 제출하여 공개시켰다. 1992년 5월 5일부 미국신문 《헤랄드 트리뷴》은 《국제원자력기구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4일 북조선이 기구에 작은 전화번호책만큼 두터운 핵설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3개의 원자로들을 공개하였다.》라고 조선과 기구만 알고있어야 할 자료들을 발표하였다.

1992년 11월 8일 남조선의 한 방송도 제4차 비정기사찰이 끝나는 차제로 기구가 고위대표단을 평양에 보내게 되여있다고 보도하였는가 하면 13일에는《미국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북조선에 대한 핵사찰결과를 입수하여 면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있는중에 있다.》라고 공개하였다.

이 모든것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작간에 의한것이였다. 1992년 5월 6일 기구의 한 책임관리는 조선대표에게 《기구는 규정상 귀국이 제출한 보고서내용을 3자에게 절대로 공개할수 없게 되여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귀측이 조미관계를 생각하여 보고서내용을 그들에게 적당히 알려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하였는데 당사자인 조선이 결심하기도 전에 그는 돌아가자마자 제꺽 미국에 먼저 보고하고 공개하였던것이다.

지어 1992년 7월 22일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은 체면도 없이 미국회 하원《합동청문회》에 불리워가 조선에 대한 사찰결과를 시시콜콜히다 통보하고 미제의 대조선강경정책에 동조해나서는 추태를 부리였다.

미제는 조선의《핵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조선과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대결로 전환시킴으로써 저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막뒤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였다.

미제는 1993년 5월 11일 여러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로 하여금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조치를《재고려》할것을 강요하는 부당한《결의》를 채택하도록 조종하였다.

한편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에 대한 그 무슨《성명》을 발표하도록 교묘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의 조종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1993년 4월 9일 비공식협상끝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선과 협상을 계속하는것을 장려한다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미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로 하여금 1994년 3월 31일에는 조선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추가사찰을 받아들일것을 호소하면서 당치 않은 요구를 제기하는 《의장성명》을, 5월 30일에는 조선을 걸고드는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하도록 추동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외면하고 미제의 압력과 전횡의 도구로 리용되고있다는 오명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

유엔이 미제의 어용기구로 전락되고있는데 대하여 1992년 5월 말레이시아신문 《스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의 채택은 미국이 이 리사회를 조절통제하면서 국제법에 구애됨이 없이 저들의 리해관계를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쓰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를 《미국안보리사회》로 만들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지금 유엔안보리사회는 공정성, 도덕성, 합법성이 없이 미국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로 되였다고 폭로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조선문제를 국제화하

는데 리용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이외에도 조선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것과 관련하여 1994년 6월 15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에 《대북조선제재결의안 초안》을 제출한데서도 나타났다.

미제와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에 의하여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은 엄중히 침해당하였다. 조선의 참을성과 인내성은 한계에 부딪쳤다.

미제는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남조선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시키며 조선에 대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할 자기의 국제법적의무를 리행할 대신 구태의연하게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하였다.

특히 1992년에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합의가 이룩되고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국제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있는 조건에서도 남조선에 있는 미제의 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사찰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로하여 미제의 핵위협에 대한 조선인민의 우려는 의연히 해소되지 않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미제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시작되기 전에 중지하였던

《팀 스피리트》핵합동군사연습을 핵사찰이 진행되고있는 때인 1993년 1월 26일에 재개한다고 공식선포함으로써 핵위협을 더욱 로골적으로 증대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조선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행하려는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조선에 집단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다.

만일 조선이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음모를 저지시키지 못하면 온 민족을 대결과 전쟁에로 몰아넣고 대국들의 희생물로 내맡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였다.

공화국정부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담보협정을 발효시킨것은 핵위협을 받으면서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의 제재와 압력까지 받기 위해서가 아니였다. 그러나 조선이 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선에 대한 핵위협은 더욱 증대되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파괴되는 사태가 빚어지고있었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예측할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로 번져지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1993년 3월 8일 전국

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데 이어 3월 12일에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중대조치를 취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에는 매 조약참가국은 자기 나라의 최고리익이 위협을 받는 특수한 사태가 조성되였을 때 이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고 명백히 규제되여있으며 따라서 조선의 이 조치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자위적, 합법적권리의 행사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바로 미제의 책동으로 하여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1990년대 전반기의 조선반도핵위기사태의 진상이다.

미제의 끈질긴 책동은 쓰디쓴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예상치 못했던 조선의 강타에 넋을 잃고 갈팡질팡하던 미제는 끝내 조미회담장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1993년 6월 11일에는 조미공동성명이, 1994년 8월 12일에는 조미합의성명이 발표되게 되였다. 특히 1994년 10월 20일 당시의 미국대통령 클린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을 담보한다는 서한을 보내여왔으며 10월 21일에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조선을 당장 먹어치울

것처럼 으르렁대던 미국의 최고당국자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머리를 수그리고 항복서나 같은 담보서한을 보내오고 미국이 굴복하여 조선의 의도와 주장이 그대로 담겨진 조미기본합의문에 수표한것은 조선민족사에 처음 있는 일로서 일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결국 1990년대의 조미핵대결전은 조선의 승리로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2. 조선의 핵억제력

1990년대에 조선반도핵위기사태를 조성하여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던 미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조선반도에 또다시 제2의 핵위기사태를 조성하고 조선을 고립압살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이미 1998년에 조선의 금창리에 지하핵시설이 비밀리에 건설되고있다는 국제적여론을 환기시켜 핵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던 미제는 많은 대가를 치른 그에 대한 《방문》에서 그것이 핵시설을 위한것이 아니라 텅 빈 굴간이라는것이 확인되자 새 세기에 들어와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을 날조하는 모략행위에 달라붙었다.

미제는 2002년 7월부터 조선의 《핵개발》에 관한 허황하기 그지없는 《정보자료》들을 날조하여 언론을 통해 국제사회에 돌리는 한편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2002년 10월초 미국무성 차관보 케리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평양에 온 케리는 고압자세를 취하면서 조선과 대화나 협상을 하기 위하여 온것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왔다고 을러멨다. 그는 무턱대고 조선이 조미기본합의문

을 위반하고 《우라니움농축》에 의한 핵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있다고 걸고들면서 이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선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관계개선도 없을뿐아니라 조일관계,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처하게 될것이라고 하며 극히 위협적이며 오만한 최후통첩식의 태도를 취하였다.

미제가 대화가 아니라 힘과 강권으로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하고있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은 미제의 대조선적대시강경정책이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것도 가질수 있게 한다는것 등으로 켈리에게 오금을 박았다.

그런데 미제는 켈리가 돌아간 후 조선이 《우라니움농축》에 의한 무기계획을 《시인》하였다고 왕청같이 외곡된 여론을 국제적으로 전파시키면서 저들이 이미 짜놓은 《북조선핵씨나리오》를 연출하였다.

미제는 조선이 《핵무기개발계획시인》을 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이 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 특사를 파견하고 해당나라 고위당국자들을 미국에 끌어들여 쌍무적, 다무적안보협의들을 벌리면서 조선을 무장해제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한 《선핵포기》주장을 국

제무대에 기발처럼 내걸었다.

조선반도 제2핵위기사태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미제가 조선반도 제2핵위기사태를 발생시킨것은 계획적이며 의도적인것이였다. 그 목적은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조선을 《핵범인》으로 몰아 국제적으로 고립압살하자는데 있었다.

미제는 북남관계, 조일관계개선을 가로막으며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경수로건설지연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였다.

미제가 조선반도에 또다시 핵위기사태를 몰아온것은 우선 북남관계, 조일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킴으로써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서였다.

2002년 7월 25일 조선측은 중단된 북남당국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는 등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제안을 남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남측이 호응해나섰다.

그리하여 2002년 하반년부터 북남관계는 일련의 곡절을 극복하면서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좋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반세기이상에 걸친 분렬의 장벽에 구멍이 뚫리고 북남사이에 당국과 민간급의 접촉과 교류, 대화가

활성화되였으며 끊어진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공사가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시작되였다.

한편 2002년 9월에 일본총리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하고 력사적인 조일평양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일관계가 새로운 력사적출발을 할수 있게 되였다.

북남관계, 조일관계에서의 극적인 변화는 미제로 하여금 심리적압박감과 초조감을 느끼게 하였다. 자칫하다가는 미국이 조선반도문제해결에서 주도권을 잃고 남조선, 일본에 끌려다니는 꼴이 될수 있었다.

특히 미제는 남조선강점 미군주둔명분이 없어질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남조선, 일본이 조선과의 관계개선에로 나가는것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역전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제는 모략적인 핵카드를 또다시 꺼내들고 조선의 《핵문제》를 국제화하려고 하였던것이다.

미제가 조선반도에 또다시 핵위기사태를 몰아온것은 또한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경수로건설지연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1993년 3월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자 이에 바빠맞은 미제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마당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미회담에서 조선의 주동적이며 건설적인 노력에 의하여 1994년 10월 21일에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문은 공화국의 흑연로체계를 경수로체계로 교체하는 문제, 조미사이의 정치 및 경제관계정상화문제,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보장문제, 핵전파방지체계강화문제 등 핵문제해결을 위해 조미쌍방이 해야 할 의무를 공약한 력사적인 문건이였다.

그러나 2001년 1월에 출현한 부쉬(2세)행정부는 《경수로에서는 흑연감속로보다 몇배 더 많은 플루토니움이 추출될수 있다.》느니, 《2003년은 경수로완공목표이지 법적시한은 아니다.》느니, 응당 중단해야 할 《핵시설동결의 대가로 경수로를 건설해준다는것은 말도 안된다.》느니 뭐니 하며 생억지를 부리였다.

미제는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비공개량해록에 따라 《경수로타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부분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조선이 《핵사찰》을 받게 되여있으나 2002년 8월 경수로기초콩크리트타입시작과 함께 조선이 국제원

자력기구의 《조기사찰》을 받을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경수로지원을 할수 없다는 부당한 안을 들고나왔다. 미제의 고의적인 태공으로 경수로건설은 중단되였다.

미제는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중유제공을 2002년 11월 14일 끌내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12월부터 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케도)를 통한 중유납입을 정식 중단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하였다.

미제가 해마다 조선에 제공하게 되여있는 50만t의 중유로 말하면 그것은 조선에 대한 원조물자도 아니고 선사품도 아니다. 그것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조선의 핵동결에 따른 동시행동조치로 맞물려져 미국이 유일하게 리행해오던것이였다.

미제의 중유제공중단조치는 조선으로 하여금 조미기본합의문을 더는 존중할수 없는 길로 떠밀었다. 조선에는 당장 전력공백이 생기게 되였으며 따라서 부득불 핵동결조치를 해제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조선의 정당한 자주권행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저들의 하수인인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발동하여 조선문제를 또다시 국제화하면서 극단에로 몰아갔다.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부추겨 2002년 11월 29일에 이어 2003년 1월 6일 조선이 자위적 조치로서 핵시설의 동결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가 설치하였던 감시카메라를 해제하고 기구의 사찰성원들을 내보낸데 대하여 문제시하면서 조선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국제원자력기구는 《결의》들에서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핵문제》의 본질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효력발생을 림시정지시킨 조선의 특수지위를 무시하고 (1993년 3월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공화국은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이 조약에서의 탈퇴효력발생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림시정지》시킨 특수한 지위에 놓여있었다.) 조선을 《죄인》처럼 취급하며 평화적핵활동을 위한 조치를 그 무슨 다른 《핵계획》으로 묘사하면서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하라고 강박하였다.

《결의》채택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은 조선이 몇주일내로 그《결의》를 리행하지 않으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미제의 철저한 하수인, 대변인으로 전락되여있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힘으로 조선을 무장해제시키려는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구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결의》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조미기본합의문을 란폭하게 위반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인 조선에만 미국의 무장해제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자위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기구는 미국이 하려던 말을 그대로 다 했다.》는 평가까지 받은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내걸고있는 공정성의 간판이 얼마나 허위이고 위선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조선은 더이상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애되여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침해당할수 없었다.

따라서 공화국정부는 2003년 1월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국가의 최고리익이 극도로 위협당하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정식 탈퇴한다는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하였다.

《첫째, 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

동성명에 따라 핵위협중지와 적대의사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림시정지〉시켜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것을 선포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것을 선포한다.》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정식 탈퇴한것은 미제의 대조선적대시강경압살정책에 대한 단호한 초강경대응으로서 천백번 정당한것이였다.

그런데도 미제는 조선의 자위적조치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대한 《위반》으로, 《국제적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시하면서 2003년 1월 17일 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케도)를 통한 《대북조선경수로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국들과의 협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를 부추겨 특별관리리사회의 《결정》으로 조선의 《핵문제》를 유엔에까지 끌고가는 등 국제적인 대조선핵압박공세를 더욱 악랄하게 벌렸다.

이처럼 미제는 북남관계와 조일관계개선을 가로막으며 경수로건설지연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를 조종하면서 조선의 《핵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온갖 모략책동을 다하였다.

미제는 다음으로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을 외곡하면서 국제적여론을 환기시켰다.

원래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제의 핵위협을 청산할 목적밑에 조선이 먼저 발기한것이다.

조선이 지난 시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결한것도 다름아닌 미제의 핵위협을 제거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미제는 이 모든것을 조선을 고립압살하는데 악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로골적인 핵위협을 통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부득불 전쟁을 방지하고 자기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수 없게 떠밀었다.

이에 대하여 2004년 미국대통령선거시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섰던 국회의원 케리는 9월 12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부쉬행정부가 집권후 북조선과 직접 대상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핵악몽이 일어나게 했다.》고 공개비난해나섰으며 미국의 국제정치문제연구소

기관지《포린 폴리씨 포커스》는 2005년 2월 22일부 론설에서 《부쉬는 집권초기부터 북조선을 군사외교적으로 매우 거칠게 대해옴으로써 결국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놓았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도 2005년 2월 11일부 사설에서 《북조선의 핵보유선언은 부쉬행정부가 북조선을 고립에로 몰아가면서 실책을 범한데 있다. 지금까지 북조선에 대한 부쉬행정부의 대응은 비리성적이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 근본적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정당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증언자료를 통해서도 핵위협으로 조선을 압박해온 미제의 책동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조선의 핵억제력강화조치는 이처럼 미제의 가중되는 핵위협과 군사적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것이다.

조선의 핵억제력보유는 미국식《힘의 론리》에 기초한 강권조치가 성행하는 국제무대에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응당한 대응이며 국제법상 합법적조치이다.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에는 《국가는 무장침공을 반대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권을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따라서 자위권의 견지에서 조선이 핵억제력을 보유하는것은 합법적이며 핵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미제와 맞서 정당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드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또한 국가들사이의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60조 1항에 따라 미제가 핵문제와 조미관계문제에 대하여 조선과 체결한 각종 조약을 리행하지 않았으므로 핵억제력을 보유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핵페기》에 의한 《선핵포기》주장만을 계속 고집하면서 저들의 핵위협은 뒤전에 미루어놓고 조선만이 핵무기를 내놓으면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는것처럼 비핵화의 본질을 오도해나섰다.

그리고 이 그릇된 견해를 저들의 동맹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류포시켜 어떻게 하나 저들의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하였다.

미제는 조선의 《핵보유가 안전보장과 량립될수 없다.》느니, 조선의 《핵포기가 곧 반도비핵화》라느니, 《선핵포기》만 하면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집단안전담보》도 제공하고 《혜택》도 차례질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국제적여론을 불

러일으키려고 책동하였다.

이것은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의도적인 외곡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수 없게 만든 근원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가증되는 미제의 핵위협을 청산하여야 한다.

조미관계가 정상화되여 신뢰가 조성되고 조선에 대한 미제의 핵위협과 적대시압살정책이 완전히 제거되면 조선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는 자연히 해제될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3.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

미제는 세계를 저들이 지배하는 1극세계로 만들려는 패권주의정책실현에서 조선을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정치외교적압력과 군사적위협, 경제적봉쇄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미제는 대량살륙무기의 전파를 방지한다는 그 무슨 《전파안보발기》라는것을 제안하고 그것으로 조선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는 원래 미제국주의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인류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써먹은것도 바로 미제국주의이다.

미제는 최대의 핵보유국이며 대량살륙무기생산의 왕초이다. 오늘 미제는 전인류를 전멸시키고도 남을 수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랭전시기는 물론이고 랭전이 종식된 후에도 집요하게 대량살륙무기의 《전파방지》를 제창하였다.

랭전시기에는 이전 쏘련과의 치렬한 핵군비경쟁을 통하여 이전 쏘련을 제압하고 핵독점지위를 차지하려고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의 구

호를 추켜들었다면 랭전이 종식되고《9.11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미국에 대한 최대위협이 테로와 《악의 축》, 《불량배국가》들로부터 온다고 하면서 반테로전쟁을 벌리고 미국에 맞서나가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고립압살하는데 《전파방지》의 변종인 《전파안보발기》의 구호를 내들었다.

미제가 고안해낸 《전파안보발기》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와 탄도미싸일 등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이 해상과 공중을 비롯한 여러 통로로 거래되는것을 다국적무력으로 봉쇄하며 더 나아가서는 선제공격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수립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전파안보발기》의 실현과정은 대량살륙무기의 《전파방지》라는 구실밑에 미제에 의하여 제창된 때로부터 그후 거듭되는 론의와 그 실현을 위한 군사훈련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미국주도하의 다국적무력이 동원되는 새로운 《전파방지체제》를 수립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2003년 4월 국제사회는 공해와 국제항로에서 무기전파협의가 있는 선박과 비행기를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떠들면서 《무기전파방지안전구상》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같은 해 5월 31일 뽈스까를 행각한 부쉬는 이 나라 남부도시 크라꼬브의 한 요새에서 연설하면서 11개 추종국가들을 규합하여 《해상 및 공중단속》을 기본으로 하는 《무기전파방지안전행동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후 프랑스의 에비앙에서 있은 8개국수뇌자회의에서는 이것을 《무기전파방지안보체계》로, 6월 12일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 벌린 11개 추종국가들의 첫 총회에서 《전파안보발기》로 완성하였다. 미제는《전파안보발기》를 위한 이 첫 총회에서 매개 나라들이 국내법을 리용하여 령해와 령공은 물론 지어 공해에서까지 《의심》되는 선박과 비행기를 검열하는 등 엄격한 단속통제를 진행할것을 추종국가들에 강요하였다.

그후에도 미제는 《전파안보발기》에 관한 각종 총회, 실무회의, 전문가급협상을 벌려놓고 추종국가들과 론의를 거듭하면서 대량살륙무기를 전파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미국주도하의 다국적군으로 집단적인 봉쇄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 모의하였다.

이러한 모의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미제는 《대량살륙무기전파위협을 저지하는 국제사회의 능력강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실동훈련을 조직진행하였다.

미제가 내놓은 《전파안보발기》의 첫째가는 목표는 바로 조선이다.

2003년 5월 미국대통령 부쉬가 《전파안보발기》안을 내놓을 당시 일본의 《교도》통신은 부쉬가 《분명 북조선과 같은 나라들을 보다 엄격히 단속하는 문제를 념두》에 두면서 이 제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하였고 《산께이신붕》 2004년 3월 31일부는 《북조선과 이란 등을 시야에 둔 PSI(《전파안보발기》)는 지난해 일본 등 11개국의 참가하에 발족되였다.》고 까밝혔으며 파키스탄에서 발간되는 신문 《더 뉴스》 2003년 9월 3일부는《전파안전안이 북조선을 딱 짚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그 목표가 공산국가인 북조선이라는것을 의심치 않고있다.》고 명백히 게재하였다.

또한 2003년 9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전파안보발기》에 관한 회의에서 이 제안실현을 위한 11개국 공동계획이 작성되였을 때 오스트리아의 《아시아 타임스》 2003년 9월 12일부는 《이 전파안전제안은 북조선을 기본목표로 겨냥하고있다.》고 썼으며 미국의《뉴욕 타임스》2004년 10월 27일부는 10월말 일본해상에서 진행되는 미국주도하의 다국적해상합동훈련은《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로선을 예고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미제는 《전파안보발기》를 실행하기 위한 군사연습이 조선을 겨냥한것이라는데 대하여 숨기지 않았다.

2004년 10월말에 조선과 가까운 일본앞바다에서 진행된 해상합동훈련에 대하여 미국무장관은 훈련이 진행되기 3일전인 10월 23일 도꾜에 도착하여《PSI훈련은 북조선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우려의 표시이며 불량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공언하였다. 이어 훈련당일날 미국무성 차관 볼튼은 한 전투함선에 기여올라가《북조선의 위협은 명백하다. 훈련은 북조선 등 무기확산에 관여하는 나라와의 무역거래에 유혹될수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단념하게 할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북태평양에서 진행하는 첫 훈련이기때문에 매우 의의가 큰것》이라고 하면서 PSI훈련이 바로 조선을 겨냥한 훈련이라고 내놓고 떠들었다.

실지로 미제는 《전파안보발기》를 내놓은 이후 공화국의 선박들이 많이 드나드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집합안전보장협정》이라는것을 명분으로 조선에 반출하는 물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례없이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대만에서 합법적인 무역화물을 실은 조선의 무역짐배 《베개봉》호에 대한 부

당한 강제수색과 화물압수행위를 감행하였다.

《전파안보발기》는 미제가 2002년 12월 10일 예멘부근의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항행을 하고있던 조선의 무역짐배 《서산》호를 대낮에 다국적무력으로 기습침범하고 2003년 4월 《북조선의 농축우라니움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니움관》을 실었다는 허위정보를 내돌리며 에짚트의 항구에서 프랑스화물선을 집단적으로 단속한 연장선우에서 제창된것이다.

미제는 이처럼 대량살륙무기전파를 《방지》한다는 《전파안보발기》를 통하여 반공화국《국제공조》를 《시위》하며 추종국가들까지 여기에 끌어들여 대조선봉쇄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있다.

미제가 《전파안보발기》를 내놓은 목적은 조미대결관계를 국제화함으로써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반동성을 은폐하고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하여 국제적으로 조선을 고립압살하자는데 있다.

《전파안보발기》를 통한 미제의 무모한 책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의 전략이 실천단계에로 접근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었다.

미제는 새 세기 정초부터 공화국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모독하고 2003년 8개국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조선을 《대량살륙무기전파국》이라고 헐뜯었으며 《전세계는 북조선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공화국을 정치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국방성 부장관 울포위쯔는 2003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북조선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면서 모든 아시아국가들이 조선을 반대하여 《련합전선을 구축》할데 대하여 력설하였다. 이와 함께 2004년 8월 노르웨이에서 벌린 《전파안보발기》성원국 실무회의에서 《북조선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우려의 표시》요 뭐요 하면서 《전파안보발기》가 조선을 정치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도구이라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전파안보발기》의 직접적사명은 조선의 대외경제적련계를 차단하여 경제적으로 공화국을 질식시키는것이였다.

미국방성 부장관 울포위쯔는 2003년 싱가포르에서 해상봉쇄로 《북조선경제에 압력》을 가할것을 추종국들에 강요하였으며 미국무성 차관

볼튼은 《전파안보발기》에서 《북조선선박을 단속하기 위해 유관국들의 책임분담제가 토의》된다고 떠들었다. 또한 미제는 2003년 6월 에스빠냐에서 추종국들에게 자기 나라의 법을 리용하여 조선의 선박과 비행기를 검열하는 엄격한 단속통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강박해나섰다.

미제는 조선을《대량살륙무기전파국》으로 몰아붙이면서 초기에 들고나왔던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로부터 그 폭을 일반용도의 물품들에까지 확대하여 《전파안보》라는 간판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전파안보발기》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추종국들을 끌어들여 집단적인 대조선봉쇄를 취하기로 모의하고 《선제차단》이라는 《검색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방법들을 확정하였다. 결과 미제가 주도하는 《전파안보발기련합》이 구축됨으로써 조선에 대한 다국적봉쇄가 형성되였던것이다.

또한 미제는 마드리드회의에서 《북조선의 미싸일과 핵물질의 운반뿐아니라 외화수입의 원천으로 되는 모든 물품들의 수송을 막는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저들의 경제봉쇄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현실적으로 미제는 조선선박들의 합법적인 무역활동에 대하여《비법적인 무기거래》라고 떠

들며 가로막아나서고있으며 공화국과 경제적련계를 가지고있는 다른 나라와 기업들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면서 경제무역거래를 끊을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그것을 어긴 나라와 기업체들에 《징벌조치》를 취하여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게 하고있다.

미제가 벌리는 이러한 경제봉쇄책동은 세계여러 나라들과의 긴밀한 경제기술적협조속에서 이루어지는 주권국가의 사회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범죄행위이며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봉쇄를 금지할데 대한 국제법규범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이다.

이처럼 미제가 조작한 《전파안보발기》는 대외경제거래차단으로 주권국가의 물질적기초를 파괴하려는 악랄한 경제봉쇄도구이다.

모든 사실은 《전파안보발기》야말로 조선의 사회주의정치체제를 전복하고 선군정치의 물질적기초를 허물어 버리려는 미제의 대조선고립압살전략실현의 도구, 침략전쟁의 수단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전파안보발기》를 통하여 다국적무력으로 조선을 고립압살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없는 비법행위이다.

그 비법성은 첫째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행위라는데 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1933년)은 《전쟁개시의 선언이 없이도 륙해공군에 의한 다른 나라의 령역,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공격》을 침략행위로 규정하였다. 법적견지에서 볼 때 배나 비행기는 해당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령역, 령토이다. 때문에 배나 비행기를 강제로 나포하는것은 침략행위로서 위법행위로 된다.

미제는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라는 구실밑에 여러 나라들과 합세하여 조선의 선박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합리화》함으로써 제2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그 비법성은 둘째로,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엄중히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는데 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은 그 어떠한 분쟁도 힘의 사용에 의거하여 해결하는것을 반대하고 평화적수단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유엔헌장》은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자기의 기본원칙으로, 국제법의 공인된 근본원칙으로 고착시키면서 국제분쟁들을 국제평화와 안전, 정의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요구들을 제기하고

협상, 조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등 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는 이라크침공때와 같이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라는 구실밑에 유엔의 결의나 승인도 없이 《전파안보발기》를 통하여 군사적강권과 폭력으로 조선을 다국적무력으로 짓뭉개려고 하고있다.

그 비법성은 셋째로, 해상에서의 국제법적원칙들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는데 있다.

《유엔해양법협약》(1982년)에 의하면 공해란 바다를 끼고있는 모든 나라들의 국내수역, 령해, 경제수역, 무리섬수역을 제외한 전체 바다로서 모든 나라들이 자유로이 리용할수 있는 바다이다. 공해는 연안국이건 내륙국이건 모든 국가들에 개방되기때문에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기의 기발을 단 배나 비행기를 항행 또는 비행시킬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그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상에서 자유로이 항행할수 있는 조선배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와의 무역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항행을 하는 공화국의 선박들을 다국적무력과 합세하여 집단적으로 추적하고 강제적으로 나포,

수색하는 해적행위를 감행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평화적목적을 위하여 공해가 보존되여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제88조)의 근본정신에 배치되게 조선을 겨냥한 해상합동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림으로써 자유롭고 평화적이며 안정된 바다를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격전장으로 전변시키고있다.

그 비법성은 넷째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라는데 있다.

조선정전협정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것을 규정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상은 물론 해상과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조선에 대한 어떤 종류의 봉쇄도 금지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를 구실로 조선을 《불량배국가》로 몰아붙이고 정전협정을 무시하면서 다방면적인 봉쇄조치를 취함으로써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봉쇄하고 나아가서는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하고있다.

미제가 국제법규범들과 조선정전협정을 마구 유린하고 파기한다면 조선반도와 세계의 임의의 해상과 공중은 엄중한 위기와 전쟁상태에 놓이게 될것이다.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이 미제가

내놓은 《전파안보발기》안을 놓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안으로 될 우려가 있으며 전쟁의 원인으로 될수 있다고 비평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맺 는 말

저들의 침략적목적실현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문제를 국제화해온 미제의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조선의 분렬이 지속되고있으며 공화국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실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후과는 대단히 크다.

조선인민은 반드시 미제와 총결산할것이다.

미제가 제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과 지난 시기 허리띠를 조이며 철벽으로 다져놓은 자위적국방력이 있는 한 조선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조선인민의 힘찬 진군을 멈추어세울수 없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 조선문제에 대한 국제화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면 벌릴수록 그것은 자멸을 촉진하는것으로밖에 달리는 될수 없다. 공화국의 국제적권위와 위신은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사회주의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결코 말이나 구걸로써 지켜지고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강력한 국력에 의해서만 지킬수 있다. 총대로 담보되지 않은 민족의 존엄이란 있을수 없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전쟁미치광이들과 핵으로 맞설것을 결심한 조선인민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으며 그 어떤 침략자들도 일격에 쳐부실수 있는 무적의 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2016년 1월 공화국은 미제의 날로 로골화되는 핵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첫 수소탄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뒤이어 핵탄두의 실물공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등 핵공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했다. 이미 선포한 핵탄두탑재가 가능한 탄도로케트발사시험선언에 따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0》시험발사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 9월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은 동방의 핵강국으로서의 선군조선의

위용을 또다시 만방에 높이 떨치였다.

전략탄도로케트들에 장착할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이 최종적으로 검토확인됨으로써 조선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2017년 7월 조선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번에 성공시킴으로써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여 마지막 최후계선에 들어섰음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2017년 9월 핵무기병기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의도를 받들고 조선의 핵과학자, 기술자들은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다기능화되고 초강도폭발력을 가진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을 만들어내여 시험에서 완전성공하였다.

미국의 전대미문의 핵위협소동은 조선이 미국본토에 임의의 시각에 핵세례를 들씌울수 있는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하였다.

미국은 력사적으로 지속되여온 조미대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은 70여년동안 그 어떤 《국제적공조》로도, 그 어떤 위협으로도 조선을 굴복시키지 못

하였다.

조선은 오늘까지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가는것이 조선의 빛나는 전통이다. 조선이 나아가는 길은 백승의 길이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트루맨과 아이젠하워로부터 1990년대 클린톤, 부쉬를 거쳐 오바마,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력대 집권자들의 대조선정책의 총화결과는 명백하다.

조선에는 그 어떤 군사적힘도, 국제적제재와 봉쇄도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그것이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것이다. 또 이것을 외면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 길로 나간다면 더 큰 화가 차례질수 있다는것이다.

미국이 거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대조선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것뿐이다.

미국이 대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울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조선문제가 국제화되기까지 5

조선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편 집 : 김준혁

낸 곳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 주체106(2017)년 9월

ㄱ-7202245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

ISBN 978-9946-0-1657-3
9 789946 016573 >

조선 · 평양
주체106(2017)년